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차 탈 수 있다... '개조'도 가능

신차·중고차 모두 자유롭게 매매 가능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해도 된다.

산업부는 "개정법을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장애인·국가공공자 등만 LPG차량 이용이 가능했다. 이들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로 묶여있던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이용하다가 세대를 분리하면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사용 제한을 위반,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자영업·사회적기업에 1조4220억원 규모 지원

은행권이 일자리창출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자에 1조42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5일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신보 대구 본사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중구 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씩 1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과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우수아이디어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은 (예비)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이상두 대상 기업 모두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자영업자와 데스벨리(영업철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재창업과 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최저보증료를(0.5%)를 적용한다.

일하면서 학위도 받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운영할 대학 모집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장기재직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운영할 대학을 올해 추가로 모집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유망분야(15개분야, 122개 기술개발분야) 관련학과 개설을 희망하는 주관대학을 4월 10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규모는 전국 총 5개 학과로 재교육형(석사 또는 학사) 4개, 채용조건형 영미이스터 학과(전문학사) 1개이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참여가 가능하다.

'재교육형'은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학위과정을 말하며,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하는 학위과정을 말한다.

주관대학 선정은 지방중기청의 현장조사와 전문가관(중진공)의

대면평가를 거쳐 중소기업부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에는 학과 운영비(학기당 3,500만원 이상)와 참여학생 등록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지방중기청에서는 선정된 계약학과에 대해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계약학과는 AI, 5G, 정보보호, 지능형 센서, 스마트그린, 바이오 등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된 4차 산업분야 15개 분야, 122개 기술개발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하며, 특히 영미이스터 학과(채용조건형)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계약학과 참여하는 대학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와 계약 체결 후 기업에 필요한 학위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은 과정 이수 및 수료 후 일정기간 해당기업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서은홍 기자

카풀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돈받고 운전하는 '유상운송행위'시 보상 면책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민일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제언이다.

24일 보험연구원의 KIR리포트에 실린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황현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카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카풀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관련자에게 대한 담보가 면책되게 된다.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

리가 높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보험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7시~9시, 오후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스



2019 위 건강 지키기, 풀무원다는 '위솔루션' 과 함께!

요거트 전문기업 풀무원다는(대표 정희련)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위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2019 위 건강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위 전문 특효 발효유 '위솔루션'을 출시하고 함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위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요거트 전문기업 풀무원다는(대표 정희련)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위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2019 위 건강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위 전문 특효 발효유 '위솔루션'을 출시하고 함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위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내달부터 美 월마트-아마존-이베이스서 한국 수산식품 판매

4월부터 국내 수산식품이 미국 월마트와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판매된다.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미국 월마트 840개 매장을 통해 마른 김이 판매된다. 아마존과 이베이를 통해 오징어스낵·큐브김 등 12종

의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최근 대미 수산물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협이 국내 중소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무역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김 등 한국 김 제품이 미국 30~40대 여성들에게 건강식품으로

인식을 타고 있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LA와 뉴저지 무역지원센터에 각각 입주한 활어 수출업체 더 피쉬와 김 가공업체 해송식품도 지난해 까지 각각 14만달러와 6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